

4. 主要 經濟 懸案

(1) 1998年 豫算案 評價

- (98예산안의 규모) 98년도 정부예산은 97년도 71조 4천억원에 비해 5.8% 증가한 75조 6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
 -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기 계획 사업인 교육 및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완수를 위한 예산은 계획대로 책정
- (정부의 세수확보 방안과 문제점) 금년도 경기부진에 따른 내년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각종 세제 감면의 축소와 탄력세율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징세, 연기금 예탁 규모의 증대, 교육관련 국공채 발행 등을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예산안의 보완방향) 제한된 세수하에서 우리 경제의 애로점인 SOC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민자 유치에 무엇보다도 필요

98년도 정부 예산은 97년도 71조 4천 억원에 비해 5.8% 증가한 75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 될 전망

- (98년 예산안 규모) 98년도 정부예산은 97년도 예산 71 조 4천억원에 비해 5.8% 증가한 75조 6천억원으로 편 성될 전망
 - 76조 규모의 예산은 올해 실행 예산인 69조 9천억과 비 교할 경우 9% 증가된 것임
 - 이러한 규모는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 되어 정부의 긴축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내년도 세 입 전망(2~3%의 세입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적자 예 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표> 예산 증가율 추이

(단위:억 원, %)

회계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예산규모	406,061	474,246	549,090	633,526	714,006	756,000
증가율	14.3%	16.8%	15.8%	16.2%	16.3%	5.8%

자료 : 재정경제원

주 : 일반회계+재특순세입, 1993~95는 결산, 1996~97은 예산, 1998년은 예산안 기준

불투명한 세수전망 속에서 교육 및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완수를 위한 예산은 계획대로 반영

- (98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불투명한 세수전망 속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지만,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기 계획사업인 교육 및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완수를 위한 예산은 계획대로 배정하였음
 -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교육부문 투자는 집행상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계획대로 배정
 - 따라서 제한된 세수하에서 SOC부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
 - 98년도 SOC 투자 부분의 예산증가율은 10%정도로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듯

올해 경기부진에 따라 내년도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무리한 세수확보노력이 예상됨

- (정부의 세수확보 방안과 문제점) 금년도 경기부진에 따른 내년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세제 감면의 축소와 탄력세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징세, 연기금 예탁 규모의 증대, 교육관련 국공채 발행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정부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간접세의 인상을 추진 중. 간접세 중에서도 우선 국회의 동의없이 인상이 가능한 소위 탄력세율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음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인상, 그리고 교육세의 인상을 고려중 →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최대치인 30%로 올릴 경우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가세인 교육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탄력세율을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탈루세원을 찾아 과세 형평을 기하고 징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세행정의 과학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연기금 예탁 이자를 현행 10.37%에서 1%p 가량 높여 준

- 다고는 하나, 금융부문 예탁의 경우인 12.66%보다는 아직도 낮아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은 수익률이 제대로 유지되어도 2030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
- 92 대선 공약인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1조원 가량의 지방교육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내년도 금융수요에 불필요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제한된 세수 하에서 SOC 부문의 투자를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요

○ (정부 예산안의 보완 방향)

- 제한된 세수하에서 우리 경제의 애로점인 SOC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당정협약의 과정에서 민자유치 활성화 명목으로 당초 재정원안보다 687억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 적절한 민자대상사업의 선정 ▲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민간의 자율성 보장 ▲ 수익성 유인의 신축적 적용 ▲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규제 폐지
-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명목적 연도별 계획 수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 특히 교육부문투자예산 등은 그 동안의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을 연기하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보완할 필요
- 공공부문의 가시적인 예산 절감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조직과 인원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불필요한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필요

(박 용 주)